

May
2019

수행과제명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과제책임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54 / E-mail: mjnglee@kwidmai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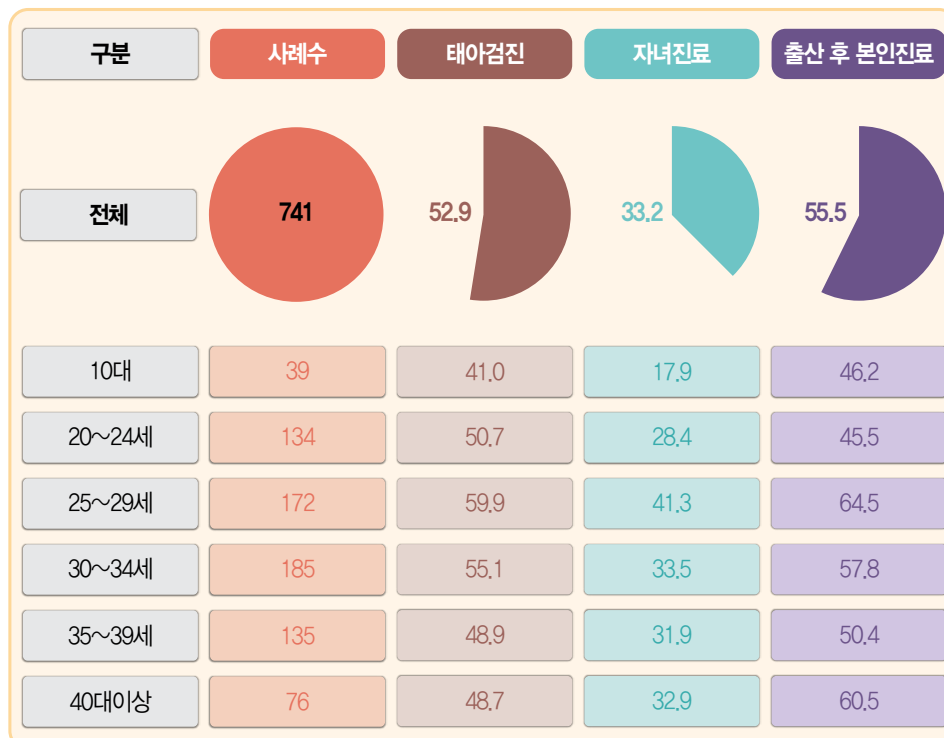
사각지대 놓인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 보호와 지원 위한 정책 강화 필요

초록

■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미혼모 다수는 임신기와 출산 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해당 시기 미혼모 다수는 두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고, 가족 등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주요 지지 기반을 상실함.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건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부실한 산전후 관리로 이어져 신생아 자녀와 산모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에 대한 단편적 보도와 자료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심층적 자료가 부족함. 본 연구에서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 의료서비스 접근 및 비용 부담, 관련 정책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미혼모 기초 통계 및 지원기준 확립, 임신기·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건강지원 강화, 임신기·출산 후 미혼모 지원 정보 전달 체계화, 주거지원 강화를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음.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못한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비율

(단위 : 명, %)



1. 배경 및 문제점

- ① 지난 10년 동안 미혼모의 양육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미혼모 양육을 지원하는 관련 정책도 확대됨
- ②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안 시행 이후 미혼모 양육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권리로 폭넓게 수용되었음.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부와 산모 지원하고 있음
- ③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미혼모 다수가 임신기와 출산 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 베이비박스를 통한 영아 유기 현상은 임신기와 출산 후 취약한 상황에 처한 미혼모 지원 공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④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많은 미혼모가 해당 시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 ⑤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의 어려움에 대해 언론보도나 사례연구가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부족함
- ⑥ 본 연구는 임신기와 출산 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접근 정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원활한 정책 서비스 전달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였음. 원가족과의 관계, 임신기와 출산 후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 및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 산후 건강관리를 조사하여, 임신기와 출산기 미혼모 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① **미혼모 관련 지원 법·정책 검토**
 - ▶ 우리나라에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은 없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미혼모 복지와 양육, 생계 지원을 하고 있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 서비스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도가 있고, 생계지원 등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음
 -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은 지역사회 미혼한부모의 의료 및 생활과 관련하여 긴급 상담과 지원 제공함.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 국민임대 우선공급 등이 있음

-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실제 이용률이 낮음. 생계지원은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혼모 관련 특례조항이 필요함. 양육비 이행 신청 자체의 어려움이 개선되어야 함.
-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제한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움. 시설 거주 미혼모의 경우 입소자의 경제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이들의 자립준비를 가로 막는 요인임.



임신기 및 출산후 미혼모 생활실태조사

- ▶ 미혼모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94.4%)과 학업 중단(68.9%)을 경험함. 42.0%의 미혼모가 출산 후 편견과 차별로 인해 취업을 거부당함.
- ▶ 임신 이후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임신 5개월 후 최근까지 미혼모가 머물렀던 경험이 있었는가 여부를 조사 결과를 보면 찜질방(15.0%), 모텔·여관(18.9%), 고시원(8.1%)인데, 특히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높음.

<표 1> 임신 5개월 후 최근까지 머물렀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찜질방	모텔/여관	고시원
전체	(741)	15.0	18.9	8.1
10대	(39)	15.4	20.5	0.0
20~24세	(134)	16.4	23.1	6.7
25~29세	(172)	22.7	23.8	9.9
30~34세	(185)	11.4	15.1	8.1
35~39세	(135)	11.1	15.6	8.1
40대 이상	(76)	10.5	14.5	10.5

주 :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서 거주했던 곳을 의미함

- ▶ 아이 아빠의 90.4%, 어머니의 67.5%, 아버지의 58.0%가 임신 사실을 인지하는데, 이에 대해 부모의 부정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산전후 시기 아이 아빠와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음. 반면, 미혼모 부모는 임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산전후 시기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 미혼모의 58.7%가 어머니로부터, 47.3%는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았음.
- ▶ 임신 인지 후 낙태를 고려한 미혼모는 37.2%, 입양을 고려한 경우 25.4%로 큰 혼란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줌. 임신기부터 30대 후반 이상 연령 집단에서 양육 의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
- ▶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있어 연령이 낮은 미혼모의 경우 병원 접근성의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병원비 부담은 국민행복카드, 가족 지원, 본인의 돈의 순으로 해결하였으며, 아이 아빠의 지원은 미미함. 미혼모임이 노출되는 것,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족, 의료진 및 직원의 불친절,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의료서비스 불만족의 주된 사유임.

- ▶ 임신 인지 후 미혼모는 아이 아빠에 대한 미움, 부모와 형제자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지인과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함. 절반 이상 미혼모가 임신기와 출산 후 마음을 터놓고 상의한 사람이 없다고 함.
- ▶ 병원비 부담으로 임신기와 출산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미혼모 건강과 관련하여 미혼모 27.8%가 임신 기간, 42.6%가 출산 직후, 40.4%가 출산후 1년 시점에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함. 임신기간 영양 섭취와 산후 몸조리는 임신기와 출산후 자녀와 미혼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침.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임신기간 64.2%, 산후 64.5%, 현재 38.3%로 임신기와 출산 직후에 높게 나타남. 영양 섭취, 아이 아빠의 폭력성, 어머니의 출산 반대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큼.
- ▶ 임신기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에 못 간 경우가 52.9%, 출산 후 진료비 부담으로 자녀 진료로 병원에 못 간 경우가 33.2%, 출산 후 병원비 부담으로 본인이 병원에 못 간 경우가 55.5%임. 25~29세 연령 집단에서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진료 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큼.

<표 2>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태아검진	자녀진료	출산후 본인진료
전체	(741)	52.9	33.2	55.5
10대	(39)	41.0	17.9	46.2
20~24세	(134)	50.7	28.4	45.5
25~29세	(172)	59.9	41.3	64.5
30~34세	(185)	55.1	33.5	57.8
35~39세	(135)	48.9	31.9	50.4
40대 이상	(76)	48.7	32.9	60.5

- ▶ 신생아 몸무게별 신생아 건강을 살펴보면 출산 직후 자녀 건강이 나쁜 비율은 2kg 미만에서 높고, 건강이 좋은 비율은 2.5kg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3> 신생아 몸무게별 신생아 자녀 건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나쁨	보통	좋음	합계
전체	(741)	10.7	26.3	63.0	100.0
2kg 미만	(13)	53.9	23.1	23.1	100.0
2~2.5kg 미만	(55)	29.1	29.1	41.8	100.0
2.5~4kg 미만	(640)	8.4	25.9	65.6	100.0
4kg 이상	(33)	6.0	30.0	63.6	100.0

- ▶ 임신기간 영양섭취와 산후 몸조리는 산후 우울증에 큰 영향을 미침. 영양섭취가 나쁜 경우 미혼모 74.4%가 산후 우울증을 경험했고, 산후 몸조리를 잘 못한 경우 73.2%가 산후 우울증을 겪었음.

<표 4> 임신기간 영양섭취·산후몸조리에 따른 산후 우울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741)	7.3	10.4	17.8	31.6	32.9	100.0
임신기간 영양섭취	나쁨	(414)	4.3	7.5	13.8	32.6	100.0
	보통	(188)	5.3	12.8	25.0	32.4	100.0
	좋음	(139)	18.7	15.8	20.1	27.3	100.0
산후 몸 조리	못했음	(515)	4.5	8.7	13.6	34.4	100.0
	보통	(138)	9.4	13.0	31.9	26.1	100.0
	잘했음	(88)	20.5	15.9	20.5	23.9	100.0

- ▶ 시설 입소 경험은 산전후 지원 시설 45.9%, 미혼모공동생활가정 40.0%, 모자원 20.4%로 나타남. 40대 이상 미혼모와 서울 지역에서 시설 입소 거절을 당한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시설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 시설에서 산후 몸조리를 잘 하지 못했고, 프로그램 참여 선택권이 부족하고, 사생활 보장 문제와 외출 제한이 제시됨.
- ▶ 출산과 양육 관련 정보 검색 수단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83.8%로 제일 높음. 기관 접촉 비율은 구청과 주민센터가 70.2%로 높게 나타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얻으려는 정보는 출산후 지원 정보가 79.1%, 핫라인과 기관을 통해 얻고자 한 정보는 영유아 양육 지원 정보가 71.9%로 가장 비율이 높음.
- ▶ 국민행복카드, 영유아무료예방접종에 대해 미혼모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서비스, 입양숙려기간 산후지원서비스는 인지도는 절반 이하이며 그 이용 비중도 미비함.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양육비 청구절차와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높게 나타남.
- ▶ 복지지원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의견으로는 서비스 청구절차와 수급자격 인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양육비청구절차의 어려움(74.9%),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려움(72.9%), 서비스 제공방식의 복잡함(61.8%), 수혜 자격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움(60.4%) 등으로 지원 서비스가 있어도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복지지원 서비스 체계 및 접근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④+⑤
1)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움	32.0	18.8	50.8
2) 서비스 제공방식이 너무 복잡함	34.8	26.9	61.8
3)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의 자격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움	32.4	28.0	60.4
4) 미혼모시설 입소자격이 너무 까다로움	22.6	15.8	38.4
5)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너무 까다로움	28.8	29.7	58.5
6) 양육비청구절차가 너무 어려움	24.1	50.9	74.9
7)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움	22.3	50.5	72.9
8) 기관종사자가 불친절함	19.8	21.1	41.0
9) 주민센터 및 구청 공무원이 불친절함	19.7	21.3	41.0

- ▶ 출생신고시 해당 기관에서 미혼부모 지원서비스에 대해 안내 받았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함.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11.8%),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16.9%)에서 안내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표 6> 출생신고시 미혼부모 지원서비스에 대해 안내 받은 비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그런 편 ④	매우 그러함 ⑤	④+⑤
전체		(741)	13.5	7.7	21.2
연령	10대	(39)	25.6	10.3	35.9
	20~24세	(134)	19.4	11.9	31.3
	25~29세	(172)	12.8	4.7	17.4
	30~34세	(185)	12.4	8.1	20.5
	35~39세	(135)	10.4	7.4	17.8
	40대 이상	(76)	6.6	5.3	11.8
지역	서울	(165)	14.5	5.5	20.0
	부산울산경남	(91)	16.5	9.9	26.4
	대구경북	(72)	12.5	6.9	19.4
	인천경기	(201)	8.0	9.0	16.9
	광주전라제주	(75)	24.0	6.7	30.7
	대전충청강원	(137)	13.1	8.0	21.2



임신기와 출산 전후 미혼모의 경험: 심층면접 자료 분석 결과

- ▶ 임신 인지 후 미혼모 대부분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혼란, 두려움,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함. 출산과 낙태,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가족과 아이 아버지 혹은 지인들로부터 낙태와 입양을 권유 받기도 함.
- ▶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는 산전후 건강관리의 어려움,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단절, 병원과 관공서에서의 차별, 시설에서 어려움을 경험함.



베이비박스 이용 경험 : 심층면접 자료 분석 결과

- ▶ 베이비박스 이용 미혼모들은 이곳 이외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이곳을 찾았다고 말함. 출산을 준비하며 미혼모 시설에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베이비박스를 찾게 되었다고 함.
- ▶ 베이비박스에서 미혼모와 영아 자녀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들에게 적절한 거주공간이 될 수 없음. 출산으로 예민한 산모와 아기가 거주하기 불편하며 자립을 준비할 만큼 장기간 머물 수도 없음.
- ▶ 양육 결정 이후 베이비박스에서 후원하는 아기용품 등의 물품은 미혼모들의 양육에 큰 도움이 됨.



복지서비스 정보수집과 양육준비 : 심층면담 자료 분석 결과

- ▶ 미혼모들은 임신기와 출산 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부족, 출산 후 양육준비의 어려움, 주거 및 취업의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음.
- ▶ 인터넷 검색으로 미혼모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찾기 어렵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미혼모 지원 서비스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을 잘 받지 못한다고 함. 출생신고시 아버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미혼모를 곤혹스럽게 함. 주위 돌봄 자원이 부족한 미혼모들은 출산직후 지원 관련 서비스 청구 등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처리함. 아이 아빠와의 갈등으로 양육비를 청구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 ▶ 주거불안정 상황에서 시설 입소를 시도하지만, 이에 실패하는 경우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움.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은 미혼모들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이유임. 또한 자녀를 혼자 돌보아야 하는 특성상 적절한 자녀 돌봄 서비스 없이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임.
- ▶ 미혼모는 고운맘 카드, 보건소 서비스, 긴급생계비, 한부모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를 자립과 양육 준비를 위해 신청하는데, 정보 접근성과 이용 자격에 따라 이용 정도는 상이함.
- ▶ 미혼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전달하기, 미혼모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저소득 미혼모 임신부를 위한 카드 금액 증액, 부성책임 강화, 미혼모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아기용품 지원 확대, 주거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정책제언



미혼모 기초 통계 및 지원기준 확립

- ▶ 미혼모의 정의와 정책지원 대상 : 과거 혼인 여부가 있는 미혼모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함
- ▶ 미혼 한부모에 대한 신뢰도 높은 포괄적 통계를 확보해야 함

- ④ **임신·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건강지원 강화**
 - ▶ 저소득 한부모나 미혼모의 임신·출산 후 의료비 부담의 실질적 경감
 - ▶ 태아·신생아·산모 건강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 ▶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 개선 : 기존 위기지원 사업 홍보 및 전달 개선, 사업 예산 및 개소수 확대, 예산규모와 운영기관 수의 확대가 필요함
 - ▶ 미혼모 욕구에 적합한 시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를 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는 전반적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해야 함
- ④ **임신·출산 후 미혼모 지원 정보 전달 체계화**
 - ▶ 주민센터의 정보전달 기능 강화 : 출생신고 시 담당자는 미혼모에게 복지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한부모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 : 미혼한부모를 위한 별도의 회선 및 인력 확보, 홍보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 민간 미혼모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제공
- ④ **주거지원 강화**
 - ▶ 미혼모의 주거 불안정을 고려한 양육 미혼모 주거지원 강화
 - ▶ 정부 주도하에 민간 후원을 통한 미혼모 주거지원 사업 전개
- ④ **부성 책임 강화**
 - ▶ 양육비 이행 지원의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 ④ **의료진과 공무원 인식 개선**
 - ▶ 정부 차원에서 의료진과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안내 자료 배포
- ④ **원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 ▶ 공적 지원을 통한 원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